KIER 기술정책 Focus

Vol.19 2009. 12.

기후변화협약은 엄청난 가격표를 수반할 것

KIE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

Friday Energy Letter

기후변화협약은 엄청난 가격표를 수반할 것

2009. 12. 11.

* 출처 : 'Climate Deal Likely to Bear Big Price Tag'- New York Times (2009.12.9)

❑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협상이 타결되면 에너지 생산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주거와 농업 방식 전환, 배출권 거래 시장 조성 등 전세계적인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게 될 전망. '이런 변화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?' 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분석 기사를 게재

❑ IEA의 추산에 따르면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만 2030년까지 각종 시설의 전환 비용으로만 10조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

○ 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, 향상된 생활 수준,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, 기후변화 재앙 위험 감소 등의 이득으로 상당 부분 상쇄 예상

○ 투자의 대부분은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IEA는 예상

"많은 사람들이 이행 비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후 변화에 대한 무대응시 발생할 비용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. 그 대가는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."

- Kevin Parker(도이체방크 자산운용 글로벌 책임자)

❑ 선진국들은 향후 3~4년간 연간 100억달러의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

○ 분담 방안, 집행 감독 기구, 지원 기준 설정 등의 문제들은 논의해야할 과제

❑ 미국의 최근 입장

○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연간 80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·에너지 관련 법안이 지난 6월에 하원 통과

- 80억 달러는 미국 정부 지원 자금의 상한선이 될 것으로 전문가 전망

○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의 다음 분야들에 대한 단기 자금 지원 발표

- 개발도상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환 지원
- 벌채, 화전 방지를 위한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
- 해수면 상승 대비 제방 축조, 고지대 이주 등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

“ ‘개도국들을 대화에 끌어들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얼마의 자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인가?’ 가 코펜하겐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”

- Robert Stavins(하버드대 환경경제학 프로그램 국장)

❑ 개발도상국들의 입장

○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협약 이행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, 자금 등의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예상 가능한 선진국들의 지원 방안이 중요

○ 선진국이 제안한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정하나 2020년까지 800억~1,500억 달러까지 증액 필요

- 이는 세계 경제 규모나 지난 경제 위기시 선진국의 구제 금융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라는 점을 강조

○ 특히 군소 섬나라들의 경우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이 매우 시급

❑ Project Catalyst 의 협약 이행 비용 분석

○ EU와 정책그룹인 Climate works가 주도하는 ‘Catalyst Project’는 가장 구체적으로 지원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이 결과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임

○ 2020년까지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,000억 달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

- 절반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조달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

·개도국에서 선진국이 수행하는 에너지, 환경 프로그램이 배출권으로 인정되고 양측 모두에 실익을 줄 수 있을 것임

- 100억~200억 달러는 항공, 선박 연료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 가능

- 250억~350억 달러는 선진국들의 융자나 지원금으로 충당 가능

·미국, EU, 캐나다, 일본, 호주 등이 주요 지원 가능 국가

KIER
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
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